

조직개편·인사 무난...미래비전 구체화 아쉬워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한달 시민과 소통 나서 어등산·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속도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3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현안 해법에 골몰하면서 조직 개편과 인사를 무난하게 마쳤다는 평가다. 다만 과거 일자리, 경제, 행정 등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준 이 시장의 미래 비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소통에 공을 들였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연태 전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민사회, 각 분야 전문가, 의회, 행정 등 30여 명으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후보 및 당선인 시절에 운영했던 한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 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 1800여 건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조직개편에서 시민소통, 민원실,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기능을 통합한 '시민소통기획관'을 신설해 시민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7일에는 20개 시민사회 단체와 '만남의 장'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 등 민감한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감 없이 의견을 들었다.

혁신도 바짝 고삐를 조이고 있다. 취임과 더불어 강조했던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혁신정책관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외부 청탁을 차단해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희망인사시스템과 시장 핫라인을 구축했다. 실국장 및 과장급 승진, 전보 등 대대적인 인사에도 잡음 하나 없었다.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방침도 명확히 제시해 혼선을 줄였다.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이용섭 광주시장

이후 곧바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2차 공모에 들어간 데 이어, 도시철도 2호선도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정면 통과하겠다는 뜻이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첫 결재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안'과 '문화경제부시장 임용 계획'에 서명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책결정, 집행 등을 맡게 된다.

또 기존 경제부시장 직위를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고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을 임명하면서 일자리, 경제, 문화로 이어지는 광주 미래 중심축을 설정했다.

장관, 국회의원이 아닌 광주시장의 신분으로 국비 확보 전선에도 뛰어 들었다. 취임 10여 일만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난 12일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광주형일자리 첫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은 최근 투자 방식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8월 중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휴가를 마치고 2일 시정에 복귀하는 이 시장은 조만간 민선 7기 전반기 구상에 대해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 숙의조사하라”

시민단체 촉구...광주시와 갈등 우려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 방식을 제안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이 지난 31일 광주시의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앞서 광주시에 제안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는 광주시에 가장 유리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안이다”면서 “숙의조사 기간과 인원 등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시와 일부 협의할 수는 있지만 공론 방식은 꼭 숙의조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16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안으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시민 250명을 선정, 5~6개월의 학습과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숙의조사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방식이었고,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250명의 시민을 선정하려면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1차로 2만여명 이상의 안심 번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규정상 선거조사에만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의 휴가가 끝나 8월 2일께 공론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단체와 광주시 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이날 시민모임 관계자는 “만일 광주시에서 숙의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안을 내놓는다면 추후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 “광주시는 공론화가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객관적인 조사연구회 등에 공식 요청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숙의조사를 하려면 1단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양측 협의를 거쳐 인력풀에서 배정할 대상을 선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참여자지21은 논평을 내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는 찬반으로 갈려 어느 한 쪽 의견만을 존중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게 된 현안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고 박중철 열사 아버지 박정기 씨 노제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6월 항쟁 도화선 고 박중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의 노제가 열린 31일 오후 유가족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서울광장으로 들어 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디자인센터 노사갈등이여 원장 비위까지

회계 문란·공용차량 부당사용 광주시 감사위 적발 돼 중징계

심각한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제 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의 원장이 회계 질서 문란, 무리한 인사, 공용차량 부당 사용 등의 비위로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사업비를 부풀려 수의계약을 한 3명을 포함한 신분상 조치 12건(중징계 1, 경징계 2, 주의 6 기관장경고 3), 재정상 조치 511만2000원 회수,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등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원장은 공용물품을 사비로 구입한 후 정상적인 정산절차가 있음에도 지난 2016년 자신이 소개한 A업체와 짜고 ‘사업비를 부풀려 돌려받는 방법’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A업체 대표의 지급 거절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비를 떼었다. 대신, 자신의 사비를 보충하기 위해 2017년에 다른 공사의 B업체 대표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200만원을 돌려받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장은 지난 2년 3개월여 동안 중

간관리자(팀장급) 등을 대상으로 조기 전보, 파견근무 등 수시인사를 21회나 단행했다. 이 밖에도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출퇴근과 공휴일 등에 개인용으로 사용해 유류비, 통행료 등 297만4000원을 지출했다.

또 직원들의 휴가를 권장하고 촉진해야 함에도 1주일 전에 결재를 받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 개인정보, 노동조합 활동 등이 포함된 직원들의 경위서를 전자계산기에 공개해 개인의 사적 비밀을 노출시키는 등 회계·인사·조직 관리에 심각한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또 ▲인사위원회 심의 부적정(5급 1명 추가 승진, 승진후보자 면접 제외) ▲단체협약 내용 불합리(본부장, 단장 채용 시 노조 합의) ▲수의 계약 과다결정(전체 계약 건수 중 86%) 및 공개실적 미흡 등을 적발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노사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광주디자인센터가 지역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징계를 의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청년비상금 통장' 인기

2598명 신청...200명 선정 공개 추첨 통해 7일 발표

광주시의 '청년비상금통장' 사업에 2598명의 청년이 신청서를 접수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공개추첨을 통해 이 가운데 2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비상금통장은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청년의 채무를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소액단기 저축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더해 200만 원을 마련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실시한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악성화된다'는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고, 저축지원금 청년이 원하는 부채 해소정책 1위였다.

비상금통장은 근로빈곤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신청자 접수과정에서도 중

양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높은 호응을 보였다. 특히 지역 내 저임금과 낮은 이직에 시달리는 청년들 다수가 신청했다. 불안정한 이직이 청년의 현실을 반영해 복지적 관점의 보장성을 강화한 점이 장기 재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저축지원 사업들과의 차이이다.

제출 서류 등을 간소화해 열악한 고용환경에 있는 청년층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의 문턱을 낮춘 점도 다른 지원들과 차별화 된다.

청년비상금통장의 최종선정자는 공개 추첨을 통해 8월 7일 발표하고, 18일 통장 배부식을 열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사업이 청년 부채와 생활안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데다 선심성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신청에서 탈락한 청년들의 상실감 또한 작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한결같은 믿음, 좋은 시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스마일장비 2대 운영
- Best Skilled 닥터 선정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